

사회진보연대 주간 소식지

사회화와 노동

발행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문의 전화 02-778-4001~2 | FAX 02-778-4006 | E-mail pssp@jinbo.net

정기구독 신청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www.pssp.org)에서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632호] ‘노동자를 쥐어짜야 사는 우체국’ 이 흔들리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 출범을 지지하며
- [633호] 효과도 없고 위험만 초래할 8.28 전월세 대책
 - 공정임대료·장기임대제도 도입과 공공주택 확충이 필요하다

‘노동자를 쥐어짜야 사는 우체국’ 이 흔들리고 있다!

- 재택위탁집배원지회 출범을 지지하며

시급 5300원짜리 사장님?

지난 4월,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겠다는 통보가 일방적으로 내려왔다. 재택위탁 배달운영지침이 개정(2013.2)되면서 관련 소득세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그 날 처음으로 자신들이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13년간 딱 850원 인상된 시급 5300원,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에 80만 원 내외를 받는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3.3%의 추가세금징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소득세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추가로 내야한다는 소리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본인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최대 15~20만원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흥과 용인수지 등 일부지역에서는 저항의 표시로 배달을 거부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개별 접촉을 통한 설득 및 계약해지’라는 지침만 각 우체국에 전달했을 뿐 아무런 해명도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재택위탁집배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다. 그 결과 2013년 9월 2일, △노동자성 인정 및 처우 보장, △사업소득세 징수 폐지, △시간 외 수당 지급, △생활임금 보장, △여름휴가 및 월휴가 보장이라는 요구를 걸고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가 출범했다.

‘재택위탁집배원’ 이 뭐예요?

재택위탁집배원이란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집이나 배달현장에서 직접 받아 각자 계약한 시간(4~7시간)동안 배달하는 일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재택위탁집배원은 2002년부터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겨났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택배물량이 증가하자 이를 집배원들이 모두 감당할 수 없어 우편물 일부를 위탁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택위탁집배원은 전국에 약 690명이 존재하며,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은 대부분 40~50대 여성들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단시간근로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시작했지만 현실은 지옥이었다. 재택위탁집배원 1인당 하루 배달 물량은 2,000(비수기)~4,000통(폭주기)이고, 1인당 1000세대 정도를 담당한다. 바쁠 때는 택배배달이 추가되기도 한다. 다음 날 배달할 우편물이 전 날 저녁 집으로 배달되면,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새벽까지 우편물을 구분하고 다음 날 배달을 시작한다. 우체국과 계약한 근무시간은 배달하는데 모두 소요된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우편물을 분류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사장님’이기 때문에 계약한 시간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배달하면 된다는 우체국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재택 위탁집배원들은 혼자 물량을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 늘 시간 외 노동을 하지만,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시간 외 노동까지 고려하면 시급은 최저임금을 훨씬 밑돈다.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든 고객들의 불만까지 고스란히 혼자 책임져야 하는 시련은 덤이다. 우체국은 이미 ‘위탁 계약’을 통해서 모든 책임을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인력충원 대신 비정규직 늘리는 우체국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배원(기능직공무원, 상시위탁집배원), 위탁택배배달원, 우편집중국비정규직(우정실무원),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연일 우정사업본부 앞에 찾아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불만들이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적자를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해결해 온 우정사업본부의 시장화·상업화 전략의 문제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시차출근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바 있다. 집배원들은 이미 하루 10~12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시간 외 노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 집배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다. 더불어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간단축은 노동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문제는 집배원들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우편업을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특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정규직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상시위탁집배, 위탁택배, 집중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나뉘어 입맛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스마트폰의 발달로 일반우편이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택배물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배달하는 물건의 부피와 무게도 늘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늘어나는 물량을 집배원들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적정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상시집배원, 위탁택배배달원, 재택위탁집배원 등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했다. 이렇게 우체국이라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에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이 없는 우체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노동조합,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아마 사업소득세 걷는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그냥 다 참고 일했을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가했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건 몰랐으니깐요. (……) 무엇이든 하기 전엔 두려운데 하고나니 용기가 생기네요.”

노동자들을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우체국, 그 안에서 가장 외면 받는 사람들이 바로 재택위탁집배원들이다. 우편물을 개인적으로 받아 배달하다보니 같은 ‘재택위탁집배원’이라도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어렵게 연락이 닿아 모임을 확대해나가고, 두려웠지만 창립총회도 하고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나니 자신감이 붙었다. 이제는 노동자로 인정받고,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함께 싸우고 싶다는 것이 그녀들의 바람이다.

우편업은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을 상승시키고, 우편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체국 내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연대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시장화·상업화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미약한 움직임이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의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 흐름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야 한다. 노동자를 쥐어짜야만 사는 우체국은 이미 노동자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효과도 없고 위험만 초래할

8.28 전월세 대책

- 공정임대료·장기임대제도 도입과 공공주택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폭등하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며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하 8.28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거안정'도 '전월세 대책'도 없다. 이번 8.28 대책은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서러우면 빛내서 집 사라'고 하고,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집값을 떠받쳐 줄 테니 '또 집 사라'고 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부동산업계에는 민간의 기업형 임대업을 지원할 테니 '집 많이 사라'고 까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8.28 대책은 각종 규제완화와 새로운 부동산 금융상품 도입을 통해 '집 사라, 집 사라'는 주문을 반복하는 '부동산 거품유지,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효과도 없고, 위험만 초래하는 8.28 대책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부담완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방향을 위한 각각의 대책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첫 번째 방향, 즉 부동산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세금감면 그리고 부동산 금융상품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오히려 기업형 임대업 등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임차인의 부담완화'는 그저 8.28 대책이 전·월세대책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인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등 규제완화 및 세금 감면을 통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집부자를 위한 정책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효과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다. 이미 집값이 너무 높아 주택구매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해준다한들 소용이 없고,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세금감면은 동인이 되지 않는다.

그 때문인지 정부는 이번에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라는 새로운 주택금융상품을 제시했다. 이 상품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구매자가 향후 구매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로 20년간 모기지 자금을 지원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빛내서, 집 사라'는 도덕적 비난의 구호를 세련화한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포장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구매력을 어느 정도 갖춘 이들의 주택 구매를 유인하는데 사용한다

는 것이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면 공적자금인 국민주택 기금의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이 부동산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하면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관리 또는 회피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로, 향후 부동산 상품의 금융화를 다양화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하우스 푸어를 더욱더 양산하게 될 위험이 높다.

공공임대 확충방안 부실,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정부는 8.28 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밝히며,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는 서민 주거 안정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란한 매매 활성화 대책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는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방안의 전부다.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민간 임대사업자의 지원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금리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과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건설사와 부동산투자신탁 회사가 미분양주택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간 임대 시장의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일종),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임대주택 리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 관련 규제를 완

화한다고 한다.

이를 볼 때, 8.28대책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그럴싸한 명분만을 붙여놓고, 민간의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배불리고, 부동산 금융화를 더욱 가속화 한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정임대료 · 장기임대제도 도입하고, 공공주택 확충해야

정부가 전월세의 안정을 바란다면,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도하게 부푼 집값이 정상적으로 하향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규제하고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 진보진영은 비정상적인 민간 임대시장을 정상화할 방안으로 공정임대료 제도와 장기임대 제도를 검토해 왔다. 민간임대 시장에 전월세의 지나친 상승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을 통해 공정임대료를 정착시키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해 장기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면, 세입자들의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저소득층이 접근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데 힘써야 한다. 여전히 한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약 4%에 불과하다. 미국처럼 대출을 통해 집을 사도록 만들어 위기를 초래하는 소유화전략보다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오는 10월 7일(매년 10월 첫 주 월요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2013 세계 주거의 날, 박근혜 정부의 부자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맞서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자.